

“전당원 투표 권유, 문자폭탄 수준”

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당 선관위 예산 규모·내역 공개 요구... 중앙당 예산도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가 최근 진행 중인 전당원 투표 시작 후 투표 권유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규모 및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8일 오후 논평을 통해 “어제 국민의당 선관위가 당원투표를 시작한 이후로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가 문자폭탄의 수준으로 지나치게 많

이 들어와 당원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당대표 경선, 대선후보 경선 때에도 없었던 유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원 투표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위탁업체와의 계약 내용, 집행 내역 등은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현재 당원들 사이에서는 5억이

니 7억이니 감른올악이 한창이다”며 “일선의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당의 어려운 살림을 핑계로 묵살하면서 중앙당 선관위에서 이런 거액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나아가 “특히 안철수 대표가 당을 운영하면서부터 중앙당 예산을 공개하고 있다”며 “중앙당 예산공개는 지난 총선 직후 터진 리베이트 사건 의혹 대처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 혁신의 일환으로 확립한 조치이다. 그 이후 월 1회 당 예산을 정면 공개하고 이를 당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 대표는 왜 당 예산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국고보조금과 당비로 운영되는 중앙당의 예산 공개는 국민과 당원에 대한 의무”라며 “안 대표와 중앙당 선관위는 중앙당 예산과 전당원투표 관련 예산을 즉각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해”

문대통령 “절차적·내용적 중대흡결 확인” “문제 해결과 별도로 한일 외교관계 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날 있었던 외교부 장관 지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대독한 위안부 TF 결과와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급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이 미뤄볼 때 위안부 합의의 파기 내지는 재협상·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감할 수 없다”며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흡결이 있었음은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 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 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위안부 파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되는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 입장문에 나와 있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지게 지금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고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부의 최종입장 발표 전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시스

다스 전 경리팀장 “MB, 실소유주 아니면 그런 말 못해”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28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에 채 전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었다.

채 전 팀장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는 자신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명박) 당선인 신분 때 찾아낸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 신분자가 한 말이 있다.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한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검찰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채 전 팀장은 2001년 1월10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다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채 전 팀장은 지난 2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120억원 횡령에 대해서도 경리 여직원의 단독 횡령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 전 팀장은 “일개 여직원이 매년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를 빼돌릴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아니다”라며 “은행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법인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은 당시 김성호 사장이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 전 팀장을 상대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이 성격·용도를 파악하고 실제 소유주와 관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안전길 사무처장과 김경률 집행위원장 등 3명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부지검 내 다스 수사팀이 발족된 후 첫 고발인 조사다.

검찰은 이날 고발인들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백봉신사상 수상자들과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19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세연 노회찬 의원, 정세균 의장, 박주민, 우원식 의원.

이용호 의원, 서남대 폐교 후속대책도 마련 나서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협의체 추진... 어떤 경우에도 전복 뭇 의대 정원 유지 방침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서남대 정상화에 분부하는 한편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국립보건의료대, 공공의과대학 유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서남대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민에 하나 폐교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등과 서남대 관련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27일 국회의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는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정세균 국회의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서남대 후속대책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40명은 광역단체 몫으로 전북에 배정된 것인 만큼, 민에 하나 서남대가 폐교더라도 전북에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전북지역 의대 정원 유지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한 상

태며, 이른 시일내에 공식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서남대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교비 횡령을 저지른 이용호 전 이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법인에게 넘어가는 상황이다.

서남대 후속대책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보건의료대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립대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자치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김진성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한민헌구)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원비용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보대사 류수영